

제1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의결안건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2004. 12.

노 동 부
국 무 조 정 실

- 목 차 -

I. 개 요	1
--------------	---

II. 운영계획	2
----------------	---

【붙임 1】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4
--------------------------------	---

【붙임 2】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비교	5
----------------------------------	---

I. 개 요

□ 배경 및 근거

- 배경 : 청년실업해소특별법('04.3.5 제정) 및 동법 시행령('04.6.29 제정)에 의거, 청년실업대책의 전반적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
- 근거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12조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15조 :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둔다.

□ 주요기능

- 청년실업 종합대책 그 밖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청년실업 종합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기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 위 원 : 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부처 장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붙임 1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간 사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임 기 : 2년, 연임가능(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II. 운영계획

□ 회의운영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상정 안건은 정부, 노동단체, 경제단체 등이 발의하되, 사전에 청년실업대책실무위원회(이하, 청년실무위)의 검토·조정후 상정함을 원칙으로 함
- 청년특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청년특위 운영지원과 안건의 사전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청년실무위 설치·운영
- 청년실업정책의 개선점 발굴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청년특위와 청년실무위에 필요시 관련 전문가 참여 가능

□ 일자리만들기위원회와의 기능분담 및 연계방안

- 청년특위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04.2.10)에 근거, 기설치(3.26)·운영중인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와 기능상 중복
 - ※ 붙임 2 :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비교
-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확충 등에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방안의 종합적 논의를 위하여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와 연계 필요
- 따라서, 심의안건이 확실하게 구분될 경우, 양 위원회를 별도 개최 운영하고
 -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서비스 개선방안 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심의안건일 경우, 양 위원회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심의

□ 청년실업대책실무위원회 운영계획

- 청년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지원과 청년특위 심의사항의 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구성(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위원장(노동부차관)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실업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청년특위 위원인 부처의 관련국장)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 일자리만들기위원회 실무위원회와의 관계는 청년특위와 일자리만들기위원회간의 역할 분담방안과 마찬가지로
 - 청년실업문제에 고유한 안전일 경우, 별도 개최하고 전반적 실업문제와 관련된 안전일 경우, 양 실무위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심의

□ 향후 일정 및 안건(안)

- '05년초 제3차 청년특위, '05년 하반기 제4차 청년특위 개최
- 논의안건
 - 가칭 “청년실업 원인 및 대책” 심의·확정
 - 가칭 “청년실업 원인 및 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세부 계획 논의·확정
 - 청년실업대책 이행 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등

□ 기타사항

- 민간위원의 경우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원
- 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함

【붙임1】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원장 (2)	국 무 총 리	국무총리	이 해 찬
	연 세 대 학 교	총 장	정 창 영
노동단체 (2)	한 국 노 총	위 원 장	이 용 득
	민 주 노 총	위 원 장	이 수 호
경제단체 (2)	한국경영자총협회	회 장	이 수 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김 용 구
시민단체 (2)	시민의 신문	발 행 인	이 형 모
	실업극복국민재단	상임이사	성 한 표
연구기관 (2)	한국노동연구원	원 장	최 영 기
	한국개발연구원	원 장	김 중 수
교육계 및 여성계 (3)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 장	강 기 원
	한양대학교	교 수	김 분 한
	신라대학교	교 수	공 미 혜
청년실업 전문가 (5)	(주) 코리아 리쿠르트	대표이사	이 정 주
	전국대학취업실과장협의회	회 장	임 석 빈
	학교법인 기능대학	이 사 장	박 용 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진 미 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 수	어 수 봉
정부기관 (10)	재정경제부	부 총 리	이 현 재
	교 육 부	부 총 리	안 병 영
	과학기술부	부 총 리	오 명
	국 방 부	장 관	윤 광 웅
	산업자원부	장 관	이 희 범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여 성 부	장 관	지 은 희
	기획예산처	장 관	김 병 일
	국무조정실	실 장	한 덕 수
	중소기업청	청 장	김 성 진

【붙임2】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와 일자리만들기위원회 비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일자리만들기위원회
근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15조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목적	청년실업해소 대책 전반 심의·조정	일자리만들기 대책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소속	대통령	국무총리실
기능	1. 청년실업종합대책 그 밖의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2. 종합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기타 청년실업 관련 사항	1. 일자리만들기 정책의 지속적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주요정부정책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효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공동 ○ 민간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 ○ 위원 : 30인 이내(정부: 10명) ※ 정부 : 재경·교육·산자·노동·여성· 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과기·국방·중기청장 ○ 민간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 ○ 간사 : 노동부 공무원중 특위 위원장 임명(고용정책실장)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고 각계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중 국무총리 위촉 ○ 위원 : 30인 이내(정부: 10명) ※ 정부 : 재경·교육·산자·노동· 여성·예산처, 국무조정실장· 행자·정통·복지부장관· 노사정위위원장 ○ 민간위원 : 노사 대표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 위촉 ○ 간사 : 사회수석조정관
실무위	○ 위원장 : 노동부차관 ○ 위원 : 20인 이내(2·3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 간사 : 노동부 공무원중 위원장 임명(청년고령자고용과장)	○ 위원장 : 재경부차관 ○ 위원 : 25인 이내(1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 간사 : 규정 없음

청년실업종합대책 개요 및 추진실적

2004. 12.

노 동 부

- 목 차 -

I.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	1
II.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 추진상황	4
1. 기본방향	4
2.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현황	5
3. 청년실업종합대책의 평가	7
III. 청년실업종합대책의 보완	9
【붙임】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실적('04.10월말 현재)	11

I. 청년실업 현황 및 원인

□ 청년실업 현황

○ '04.10월 현재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355천명으로 전체실업자 772천명의 46.0%이며, 실업률은 7.2%로 전체 실업률 3.3%의 2.2배 수준

-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은 '98년 12.2%까지 증가한 후, '02년 6.6%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다소 상승

< 표 1 > '97년이후 청년 실업 추이

(단위 : 천명, %)

	'97	'98	'99	'00	'01	'02	'03	'03.10	'04 상반기	'04.10
전 체 (실업률)	322 (5.7)	655 (12.2)	574 (10.9)	402 (7.6)	388 (7.5)	341 (6.6)	383 (7.7)	357 (7.3)	416 (8.3)	355 (7.2)
남 자 (실업률)	188 (6.4)	404 (14.1)	355 (12.8)	242 (8.9)	229 (8.7)	206 (8.0)	220 (8.9)	218 (9.0)	230 (9.4)	212 (8.8)
여 자 (실업률)	134 (4.9)	251 (10.0)	219 (8.8)	160 (6.3)	159 (6.2)	135 (5.3)	163 (6.5)	139 (5.6)	186 (7.3)	143 (5.7)

○ 체감 청년실업은 지표상의 청년실업률보다 심각

-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취업상태에 있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존재하기 때문

○ 청년 취업 애로층은 공식실업자(355천명)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307천명), 유휴 비경제활동인구(243천명)까지 포함한다면 청년층 100명중 9.0명(905천명) 수준

○ 그러나, 취업난을 보다 심각하게 경험하는 학교를 마친 (졸업 또는 중퇴) 청년층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면

※ 전체 청년층중 재학·휴학자 제외

-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은 100명중 5.4명~13.4명 (288천명~722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 수요측면 >

○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면서 고용흡수력이 저하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80년대 7.8%, '90년대 6.3%, '03~'12년 4.8~5.2% (KDI,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2)

-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으로 동일 생산대비 일자리 증가 규모도 하락

※ 고용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수) : 68.7명('90년) → 41.9명('02년)

○ 이러한 상황이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

- 전체 청년인구중 취업자 비중인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 '96년 46.2%에서 '03년 44.4%로 감소

※ 주요기업(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의 청년 취업자 수도 '96년 638천명에서 '03년 369천명으로 269천명 감소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도 줄어들음

< 공급측면 >

○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95~'04년간 대졸자수 17만명 증가

※ 대학진학률 : 27.2%('80년) → 33.2%('90년) → 51.4%('95년) → 68.0%('00년) → 74.2%('02년) → 81.3%('04년)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대졸 취업자중 57%가 일자리와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등 대학 교육의 현장적합성 부족(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

○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최근에도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

※ 중소기업 취업 부족인원 : 9,049명('00년) → 14,495명('01년) → 204,951명('02년) → 138,947('03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 인프라 측면 >

○ 청년층 취업알선, 직업지도에 있어 공공·민간 직업안정 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미흡

-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경우 (50.6%)이며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2.0%) 또는 학교 취업소개기관을 통한 취업(1.6%)은 소수에 불과

※ 구직경로도 직업안정기관보다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 (68.3%), 친구·친지 소개(17.0%) 등 자구적 방식이 대부분

- 공공·대학 등의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대학생의 진로지도 서비스 수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 2> 대학생의 진로지도 수혜 경험

(단위 : %)

구 분	외부고용 관련기관		학과지원 서비스		대학취업 전산망		구직부직 신청정보		취업지원센터 특강세미나		취업교과목 수강	
비 율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0.5	89.5	30.2	69.8	29.7	70.3	25.2	74.8	26.7	73.3	5.32	65.4

※ 자료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채용동향, 산업계 수요 등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는 등 노동시장 정보제공 부족도 청년실업의 원인

◆ 이상과 같이 수요를 초과하는 대졸자 증가, 청년층 눈높이 조정 실패, 직업진로지도 취약 등으로 인해 **학교-노동 시장간 이행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

※ 학교교육 종료 후 첫 취업 때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 (통계청, 「청년층경제활동부가조사」, '04.5월)

Ⅱ. 청년실업종합대책('03.9.22) 추진상황

1. 기본방향

- ◇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
- ◇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
 -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 인프라를 완비하는 중장기 대책 추진
- ◇ 다만,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간 청년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지원을 강화
 - 경력직 채용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하여 취업에 있어서의 마찰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대책을 추진

2.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현황

- ◆ '04년 5,643억원을 투입, 150천명에게 일자리, 연수, 훈련 기회 제공
- ◆ 10월말 현재 4,944억원(예산대비 87.6%) 집행, 178천명 참여 (목표인원대비 118.6%)

□ 단기대책

- 청년층 일자리·직장체험기회 제공(10월: 122천명, 3,042억원)
 -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94천명, 1,436억원)
 -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제공(24천명, 1,217억원)
 - 해외시장 개척,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턴 등 해외 연수·근무기회 제공(4천명, 389억원)
-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10월: 56천명, 1,647억원)
 - 지역별 산업특성 및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IT, 지식기반 서비스직종 등 취업유망분야훈련 실시
 - 비진학청소년은 인력부족직종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S/W 기술교육 등에 초점
- 청년층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지원 등(10월: 255억원)
 - 대도시 종합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취업지원실” 설치(31개소)
 - 청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3년) 청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04.10월부터)
 - ※ 기업별로 1년간, 중소기업은 1인당 720만원, 대기업은 540만원 지원
 - 정부투자기관 등 72개 공기업에 청년채용 권고('04.7.20)
 - ※ 대상기관(정원 : 약76천명)이 3% 채용시 '04년도 최대 2,280명, 향후 5년간 최대 12천명 채용 기대

□ 중장기대책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미래형 자동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주5일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추진
-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계획 마련 시행중

※ '04.7.27 제2차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개최

○ 산학협력 강화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육성

※ 현장실습 학점제·학기제 확대,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시행, 전공분야별 취업률 공표제도 등

○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층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탐색 능력 배양

※ 직업적성·흥미검사 확대, Job 게임 등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Job World (종합 직업체험관) 설립 추진(일본 직업박물관, 독일 뮌헨박물관)

- 세부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도록 모델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붙임 :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실적('04.10월말 현재)

3. 청년실업종합대책의 평가

◆ 청년실업종합대책을 점검·분석하여 성과를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의 연구용역, 민간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청년실업대책 T/F』의 분석,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청년실업종합대책을 평가하였음

< 총괄평가 >

- 전반적으로 현재 청년실업종합대책은 학력계층별 실업자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며 안내책자, 안내 홈페이지도 없어 청년층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에 실패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

-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행정서비스 모니터 조사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효과가 적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일반국민 57.8%, 전문가 70.2%)
 - 청년실업대책 T/F 논의에서도 비교적 성과가 적으므로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 따라서, 단기 일자리 사업은 고실업 상황에서 사회적 충격 흡수의 차원에서 필요하나, 일자리 창출 효과의 지속성이 낮으므로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연수체험 >

- 직장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행정서비스 모니터 조사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일반 국민 46.7%, 전문가 51.7%)하였음
- 또한, 기획예산처의 평가에서도 청년층과 참여기업에 모두 유익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 다만, 참여자의 연수기관이 공공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됨
- 따라서, 연수기관을 민간위주로 확대하고, 청년층 직장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직업훈련 >

- 직업훈련은 설문조사결과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에도 현 수준만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
- ※ 일반국민 : 효과있음 52.9%, 효과없음 22.1%
전문가 : 효과있음 31.1%, 효과없음 42.0%
- 직업훈련은 적절한 훈련생 모집 및 교육과정 등 수요·공급의 mis-match가 가장 큰 문제이므로
- 구직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훈련과정을 찾도록 하는 훈련대상 중심의 시스템 개선이 검토 요망됨

< 해외취업지원 >

- 해외취업지원사업은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청년실업 완화 및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단기간의 해외현지기업 실무 경험에 머물지 않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

Ⅲ. 청년실업종합대책의 보완

□ 청년실업종합대책의 보완 필요성

- 청년실업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채용여력 위축 등으로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지속
- 특히, 위에서 본 바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체감되는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

< 표 3 > 최근 청년실업 추이

(단위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03년	8.3	8.7	8.1	7.3	7.2	7.4	7.5	6.9	6.6	7.3
'04년	8.8	9.1	8.8	7.6	7.7	7.8	7.6	7.3	6.7	7.2

- 청년실업은 청년층 일자리 감소 외에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지도·직업교육이 미흡하고
- 노동시장 수요공급을 매개하는 노동시장 인프라가 취약함에 따라 가중
- 또한, 향후 5%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고용흡수력 저하,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 등으로 당분간 청년실업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03년 3.1%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천명 감소

◆ 따라서, 청년실업종합대책에 대한 평가결과와 『청년실업대책 T/F』 논의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학생·청년실업자·청년취업 업무담당자·기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보완된 청년실업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 새로운 청년실업대책의 기본방향 및 향후 계획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과 민간의 투자 증대에 의해 결정되므로

○ 노동시장 수요 측면은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접근과
거시행중인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 향후, 청년실업대책은 청년층 취업소요기간 단축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공급 측면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

○ 청년층 취업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생애단계별 진로·
직업지도, 직업세계 경험을 통한 직업관·직업의식
확립에 중점

○ 일자리 제공 등 단기 대책은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시행하고, 향후에는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실업에 대응

○ 청년실업대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각 부처 청년실업대책
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 관리하고 상시적인 평가·
보완 시스템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04.12월 의견수렴 절차 추가 진행

○ '05.1월 제3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확정

○ '05년중 가칭 “청년실업원인 및 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세부계획 논의·확정

【 불임 】

청년실업종합대책 추진실적('04.10월말 현재)

(단위 : 억원, 명, %)

사 업 명	재원(예산)			인 원			소관 부서
	계획	실적	진도	계획	실적	진도	
합 계	5,643	4,944	87.6	150,193	178,132	118.6	
〈연수체험〉	1,466	1,436	98.0	79,080	94,070	118.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846	975	115.2	70,000	88,200	126.0	노동부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	300	150	50.0	6,000	3,030	50.5	산자부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230	230	100.0	2,580	2,451	95.0	교육부 산자부
중소기업체험활동 ¹⁾	40	31	77.5	-	-	-	중기청 (기금)
IT인력 해외연수 지원	50	50	100.0	500	389	77.8	정통부
〈직업훈련〉	1,932	1,647	85.2	45,202	55,772	123.4	
취업유망분야훈련	410	441	107.6	13,667	16,473	120.5	노동부
무역인력교육	13	13	100.0	1,250	1,250	100.0	산자부
문화산업 전문인력 교육	31	28	90.3	2,115	2,229	105.3	문광부
창업강좌 등 ¹⁾	50	32	64.0	-	-	-	중기청
중소기업청년채용 패키지	191	166	86.9	6,000	6,696	111.6	중기청
제대예정 사병 직업훈련 ³⁾	10	0	0.0	1,000	3,770	377.0	국방부
정부위탁훈련	903	663	73.4	12,000	14,682	122.3	노동부 (기금)
기능사 양성 특별훈련	285	265	93.0	9,170	10,672	116.3	노동부 (기금)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¹⁾	39	39	100.0	-	-	-	정통부 (기금)

〈일자리제공〉	1,493	1,217	81.5	21,491	24,288	113.0	
구인업체 개척	56	38	67.9	2,800	4,123	147.2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	187	145	77.5	3,000	3,666	122.2	노동부
지식정보자원관리	470	470	100.0	2,000	2,806	140.3	정통부
연극·국악·영화시간제 강사풀	65	65	100.0	1,400	1,313	93.7	문광부
신기술 중소기업인력지원	100	100	100.0	3,000	988	32.9	산자부
군 부서관 인력지원	250	186	74.4	2,000	2,000	100.0	국방부
시간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	12	70.6	722	636	88.0	문광부 (기금)
문화산업 인력지원	129	92	71.3	2,240	2,422	108.1	문광부 (기금)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	219	109	49.8	2,000	2,234	111.7	복지부 (기금)
초·중등 전산보조원 ²⁾	-	-		2,329	4,100	176.0	교육부
〈해외연수·취업지원〉	464	389	83.8	4,420	4,002	90.5	
청년 무역인력양성	20	20	100.0	200	193	96.5	산자부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85	85	100.0	1,000	944	94.4	중기청
해외취업지원	137	109	79.6	2,500	1,918	76.7	노동부
해외봉사단 파견	222	175	78.8	720	947	131.5	외교부
〈인프라 확충〉	288	255	88.5	-	-	-	
청소년 취업지원실	96	84	87.5	-	-	-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20	17	85.0	-	-	-	노동부
청년창업보육지원	60	42	70.0	-	-	-	중기청
학교기업육성	100	100	100.0	-	-	-	교육부
인적자원종합정보망	12	12	100.0	-	-	-	교육부

1」 지원기간 1개월 미만인 사업(중소기업체험활동, 창업강좌, 저소득S/W기술교육)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

2」 초·중·고등전산보조원은 인원산정만 포함(예산은 지자체 자체재원이므로 미포함)

3」 제대예정사병 직업훈련의 경우 7억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교재 구매, 3억은 취업교육용 CD 제작·배포에 사용할 계획(안)이며, 3,770명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합격자 수